

제201호 (2009. 4. 6)

■ 속보/위기의 건설업

- 건설업 2차 구조조정 발표-불확실성 해소에 도움 예상

■ 경제 동향

- 2월 주택건설사업승인실적, 전월비 11.7% 증가한 1만 454호

■ 정책·경영

- 중소 건설업체를 위한 해외정책금융 개선 방안

■ 정보 마당

- 녹색성장과 녹색건설, 그리고 위기 돌파의 기회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민간 선투자 제대로 활용하자

건설업 2차 구조조정 발표-불확실성 해소에 도움될 듯

- 자구계획이행 전제한 금융 지원과 철저한 경영 관리로 경영 정상화 추진해야 -

■ 건설업 2차 구조조정 현황

- 12개 주채권은행은 지난 1월 92개 건설업체에 대한 1차 신용위험평가에 이어 지난 달 9일부터 26일까지 2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했음.
- D등급을 받아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도원건설, 새롬성원산업, 동산건설, 기산종합건설 등임.
- C등급 업체들은 송촌종합건설, 대원건설산업, 대아건설, 신도종합건설, 태왕, SC한보건설, 한국건설, 화성개발, 영동건설, 늘푸른오스카빌, 르메이에르건설, 중도건설, 새한종합건설 등임.

〈표〉 건설업 2차 구조조정 명단

구분	업체명	시공능력순위	주채권은행
C등급	신도종합건설(의정부)	101	국민은행
	태왕(대구)	106	대구은행
	SC한보건설(신창건설의 자회사)	111	하나은행
	송촌종합건설(전남 광주)	136	국민은행
	한국건설(전남 광주)	152	농협
	화성개발(대구)	170	농협
	영동건설(부산)	178	국민은행
	늘푸른오스카빌(경기도 용인)	196	신한은행
	대원건설산업(경남기업의 자회사)	220	국민은행
	르메이에르건설(서울)	226	농협
	대아건설(경남기업의 자회사)	249	국민은행
	중도건설(전남 광주)	258	국민은행
	새한종합건설(전남 광주)	295	광주은행
D등급	도원건설(경기도 용인)	193	기업은행
	새롬성원산업(서울)	201	우리은행
	동산건설(대전)	221	신한은행
	기산종합건설(수원)	236	우리은행

- 건설업계의 경우 시공능력 101~300위까지 건설업체 200개를 기준으로 보면 워크아웃과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체의 7.5% 수준임.
- 퇴출 대상인 D등급(부실기업)에는 이미 부도가 났거나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업체, 또는 사주가 사라져 기업 경영 자체가 불투명한 업체들만 포함되는 데 그침.

■ 구조조정 추진의 문제점

-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에 대한 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지도 의문
 - 지난 1차 구조조정 대상인 D등급을 받은 일부 기업들은 2개월이 넘도록 이렇다 할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음. 은행이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
-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입장도 모호함. 정부와 금융당국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나 사실상 기업 회생 쪽에 무게가 실림.
- 금융당국은 이번 2차 구조조정에서 C등급 업체에도 대주단 협약을 적용해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음. B등급 업체에만 가능한 대주단협약을 워크아웃 업체들에도 적용하면 구조조정의 적극성이 떨어지고 다른 업체들의 불만도 제기될 수 있음.

■ 향후 추진방향

- 올해와 내년에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중하위권 대기업과 B등급 기업들이 잇따라 쓰러지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 장기 불황으로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함.
 - 부실을 과감하게 정리하지 않고 미래로 넘기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15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자구 계획 이행을 전제로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과 철저한 경영관리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나가야 함.
- 채권은행들이 건설업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면서 건설업 구조조정이 일단락돼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됨으로써 PF 및 공공공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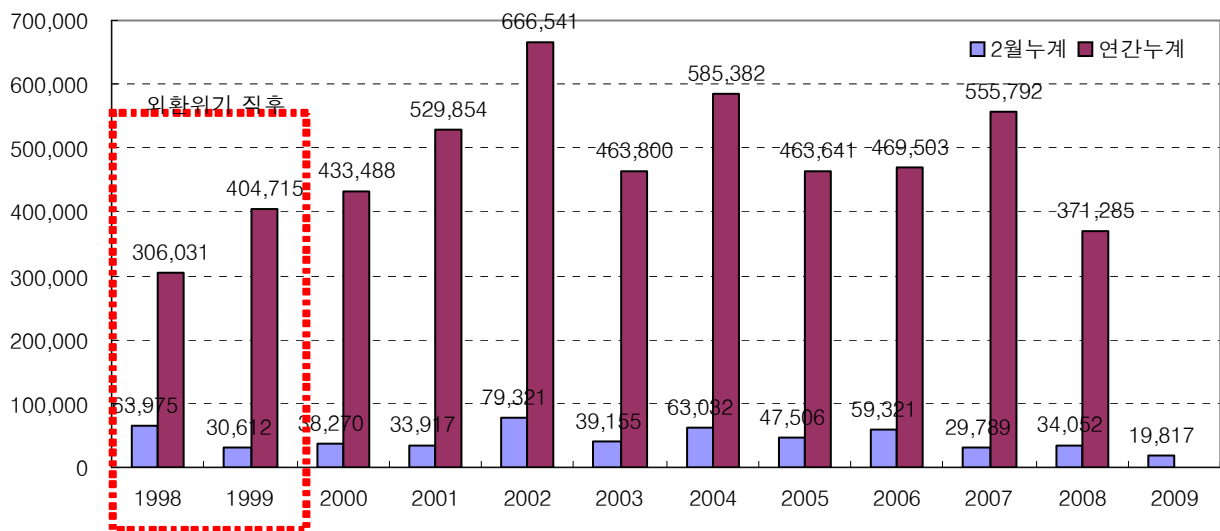
박성민(연구위원·smpark@cerik.re.kr)

2월 주택 건설 승인 실적, 전월비 11.7% 증가한 1만 454호

- 2월 현재 누적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 기록 -

- 2009년 2월(누계)까지의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은 1만 9,817호로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이 작성된 이래(1990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임.
- 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 건설업체들의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위축에 따른 민간 건설업체들의 주택 공급 위축으로 2009년 공급 실적은 하반기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지난해 37만호 수준을 하회할 전망

〈2월 누적실적과 연간 공급실적 추이〉



자료 : 국토해양부.

- 2009년 2월 중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은 전월(9,363호) 대비 11.7%가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1만 3,211호) 대비 20.9% 감소함.
 - 수도권은 전월 대비 98.6%가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10.7%가 감소한 6,126호에 그침.
 - 지방은 전월 대비 31.1%, 전년 동월 대비 31.8%의 감소세를 나타냄.
-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민간 부문의 공급 비중이 감소한 것에 반해 공공 부문의 공급이 증가하였으나, 총량 수준은 여전히 부진한 수준

- 민간 부문 공급 실적은 전월 대비 68.2%가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25.7%가 감소, 공공 부문은 전월 대비 66.3%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36.8%가 증가함.
- 규모별로는 전월 기준으로 40~60㎡, 85~135㎡ 규모에서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전년 동월 기준으로는 모든 규모에서 감소세를 나타냄.
- 지난해에 이어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월간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1990년부터 2008년까지 1월 평균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은 3만 2,960호이며, 2월 평균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은 2만 8,423호임.
-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의 감소는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자금여력 감소로 인하여 주택업체의 공급 여력이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하나 이러한 공급 감소는 향후 2~3년 뒤에 주택 수요가 회복될 경우 주택 수급 여건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지역별, 규모별, 부문별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

(단위 : 호, %)

구분	2008. 2		2009. 1		2009. 2				
	주택수		주택수	비중	주택수		누적 비중	전월비	전년 동월비
	당월	누적			당월	누적			
계	13,211	34,052	9,363	100.0	10,454	19,817	100.0	11.7	-20.9
서울	2,577	3,978	764	8.2	1,852	2,616	13.2	142.4	-28.1
부산	635	1,263	74	0.8	41	115	0.6	-44.6	-93.5
대구	97	7,080	25	0.3	38	63	0.3	52.0	-60.8
인천	1,760	2,691	496	5.3	2,511	3,007	15.2	406.3	42.7
광주	7	18	30	0.3	539	569	2.9	1,696.7	7,600.0
대전	2,694	2,988	15	0.2	668	683	3.4	4,353.3	-75.2
울산	105	1,242	72	0.8	108	180	0.9	50.0	2.9
수도권	6,862	12,639	3,085	32.9	6,126	9,211	46.5	98.6	-10.7
지방	6,349	21,413	6,278	67.1	4,328	10,606	53.5	-31.1	-31.8
민간 부문	12,275	31,879	5,427	58.0	9,126	14,553	73.4	68.2	-25.7
공공 부문	971	2,243	3,936	42.0	1,328	5,264	26.6	-66.3	36.8
40㎡ 미만	1,183	2,505	329	3.5	570	899	4.5	73.3	-51.8
40~60㎡	2,939	5,048	3,162	33.8	910	4,072	20.5	-71.2	-69.0
60~85㎡	8,452	13,344	2,860	30.5	5,804	8,664	43.7	102.9	-31.3
85~135㎡	6,161	9,500	1,776	19.0	1,603	3,379	17.1	-9.7	-74.0
135㎡ 초과	2,141	3,725	1,236	13.2	1,567	2,803	14.1	26.8	-26.8

자료 : 국토해양부.

엄근용(연구원·kyeom@cerik.re.kr)

중소 건설업체를 위한 해외정책금융 개선 방안

- 해외건설시장에서 금융이 수주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해외건설 자금 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정책금융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수출입은행의 지원 확대방안

- 수출입은행은 수출 금융과 해외 투자 금융 등 해외 정책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 금융기관임.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과 해외 투자금융 상품 중 해외건설 관련 상품으로는 직접대출, 전대자금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스, 해외투자자금 대출 등이 있음.
- 이처럼 해외건설 관련 금융 상품을 통하여 수출입은행이 해외건설사업 관련해 융자한 실적은 2004년 4,817억원, 2005년 7,730억원, 2006년 8,537억원, 2007년 1조 97억원 수준. 이는 모두 대기업에 대한 융자실적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실적은 전무(<표 1> 참조).

〈 표 1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관련 융자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대기업	4,817	7,730	8,537	10,097
중소기업	0	0	0	0
도급공사	4,817	7,730	8,537	10,097
개발사업	0	0	0	0

자료 : 수출입은행 내부자료

-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융자실적이 미미한 것은 수출입은행이 평가한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낮아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건설 융자를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됨.
-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융자를 확대하려면 현재보다 세밀한 신용 평가를 해야 하고, 보증 대상 공사에 대한 현재보다 세밀한 타당성 조사가 수반돼야 하나, 수출입은행의 입장에서는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융자를 자발적으로 확대할 유인이 없음.
-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융자를 위한 자금을 특별히 제공하는 방안과 수출입

은행의 전체 건설기업 융자 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융자 금액의 비율을 할당(quota)하는 방안이 있음.

■ 수출보험 확대방안

- 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 금융 기관임.
- 수출보험공사의 해외건설사업과 관련한 보험 상품으로는 중장기수출보험, 이자율변동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등이 있음.
- 이 중 수출보증보험 실적은 2007년 1조 7,344억원이고, 이 중 35.5%인 6,153억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실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 인수실적은 2006년 1,327억원, 2007년 4,817억원이고, 2007년에 도입한 해외사업금융보험 인수실적은 2007년 2,190억원에 불과함(<표 2> 참조).

〈표 2〉 수출보험공사의 해외 건설 관련 수출보험 인수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해외공사보험		-	3,150	-	4,408	-	2,373	-	8,730
수출보증 보험	대기업	172	12,594	92	6,316	57	9,619	72	11,190
	중소기업	145	2,326	241	3,682	212	3,627	312	6,153
	중소기업 비중	-	15.6%	-	36.8%	-	27.4%	-	35.5%
	합계	317	14,919	333	9,998	269	13,247	384	17,344
환변동보험		-	69,773	-	123,606	-	162,709	-	169,793
해외투자보험		2	805	5	646	2	1,327	9	4,817
해외사업금융보험		-	-	-	-	-	-	-	2,190

주 : 수출보증보험은 건설공사 이외의 선박 등에 관한 실적을 포함한 자료임.
자료 : 수출보험공사 내부자료

-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출보험공사가 중소기업체에 대한 해외투자보험 및 해외사업금융보험 인수를 확대해야 함.
- 특히, 수출보험공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도 해외사업금융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 현재 중소기업체가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해외사업금융보험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의섭(연구위원-eslee@cerik.re.kr)

녹색성장과 녹색건설, 그리고 위기 돌파의 기회

■ 녹색(green)의 글로벌 아젠다

- 현재 전세계적인 위기를 맞고 있음과 동시에 가장 확실한 미래 성장동력은 녹색성장 관련 녹색상품이 될 것이라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음.
- 과거 30년간 히말라야눈의 2/3가 사라졌고 유엔환경국(UNEP)에 의하면 2050년까지 히말라야눈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음.
- 대기권 내 탄소가스 함유량은 0.035%에 불과하지만 1% 도달시 반드시 지구병하기가 도래했다는 경고는 물론 탄소가스 함유량이 수직 상승해 위기가 더욱 증폭되고 있음.

■ MB정부의 3대 기본 정책 중 하나로 ‘녹색성장’을 지목

- 2008년 815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집권 5년 동안 녹색성장을 3대 정책에 포함시켰음을 선언한 바 있음.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은 크게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자립률 제고,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방안에 비중을 두고 있음.
- 녹색성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직속기구로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되고 실무팀으로 녹색기획단이 이미 발족했음.

■ 세계 각국의 녹색성장 및 녹색건설 움직임

-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정책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 일본이 지목되고 있음. 일본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60%까지 저감시키겠다는 국가정책을 발표함.
- 독일은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21%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했음. 영국은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을 발표
- 미국도 2020년까지 1990년도 수준, 1950년까지는 1990년 대비 80%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발표

■ 탄소제로 및 탄소중립도시 건설 움직임

- 국내는 세종시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60%를 감소하는 모범도시의 건설 계획을 발표. 지자체별로 ‘탄소중립도시’ 혹은 ‘저탄소도시’ 등의 이름으로 시범도시계획을 경쟁적

으로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중국은 2010년 상하이엑스포를 맞는 해에 상하이에 동탄신도시를 건설해 세계인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구체적인 내용보다 일인당 에너지 사용량을 미국의 1/10로 하겠다는 계획으로 에너지 사용량 저감에 비중을 두고 있음.
- 현재 지구촌에서 가장 주목을 받으며 건설 중인 ‘탄소제로도시’는 UAE 아부다비에서 건설되고 있는 ‘마스다르시’임. 마스다르의 3대 목표는 아래와 같음.
 - 탄소배출 제로(emission zero)
 - 폐기물배출 제로(waste zero)
 - 재생에너지 100%(renewable energy 100%)

■ 녹색성장과 녹색도시 관계

- 세계 각국이 녹색성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녹색도시를 지목하는 것은 사용하는 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고 이로 인해 탄소가스배출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임.
-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으로 갈수록 도시와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비중이 높음. 미국 등 선진국은 도시와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비중이 35~40%임에 비해 개발도상국의 사용 비중은 50% 이상이 대부분일 정도로 높음.
- 국내 건설상품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폐기물 배출량은 아래와 같음.
 - 에너지 사용 비중 : 50% - 탄소가스 배출 비중 : 50% - 폐기물 배출 비중 : 50%

■ 녹색도시 건설 「선 시범 후 확대」가 필요한 이유

- 탄소중립 혹은 탄소제로도시의 건설은 아직 검증되지 않는 시스템과 기술임. 따라서 상당한 시행착오는 물론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 손실도 충분히 예상되고 있음.
- 가장 앞서가는 마스다르시 건설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심층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녹색도시 건설에 도입 가능한 성공사례를 도입하고 반대로 실패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철저히 기술개발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큼.
- 전면 확대보다 선 시범 후 확대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로 판단됨. 건설산업에서 기여할 수 있는 녹색성장은 국가 전체의 약 25%에 이를 정도로 높음.

이복남(연구위원, bnlee@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4.2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계약법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왕세종 연구위원 참여 ▪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계약법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실무 T/F 운영 등 향후 운영방향 논의
	교육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한 정책회의에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 학교의 교육 개선을 통한 산업 현장과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 모색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주최한 '2009년 해외수주역량강화지원사업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김민형 연구위원 참여 ▪ 수주역량 강화 지원사업 신청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4.3	한국골재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골재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에 따른 준설 골재의 처리 및 판매 방안 등 논의

■ 신규 발령 연구과제

과제명	주요 내용
PQ 변별력 강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쟁력강화위의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의 PQ 변별력 강화방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모색 ▪ 우수 중견중소업체의 참여와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PQ제도의 운영방향 제시
최저가 저가심의제도의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가낙찰제에 의한 저가 수주로 인하여 업체의 수익성 악화 지속 및 공사 수행상의 문제가 발생하는바, 저가심의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적절한 공사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합리적인 수행 도모 필요 ▪ 현행 저가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시 주력

■ 기타 연구원 활동 현황

-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경남권역 경제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 연구원은 4.6(월),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국토해양부, 경상남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가 후원하고 경남발전연구원과 공동 주최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경남권역 경제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 「공정관리 실무자 양성과정」 개설
 - 연구원은 4.13(월)~17(금)까지 방배동 'HKCMC EDU-CENTER'에서 건설 및 유관 업체 공정관리 실무자급을 대상으로 "공정관리 실무자 양성과정"을 개설할 예정
 - 문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 교육팀(TEL. 02-3441-0691)

민간 선투자 제대로 활용하자

SOC 사업의 공기 지연은 그동안 공공 건설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공기 지연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총공사비를 증가시키는 등 폐해가 크다. 특히 공공시설은 제 때 준공되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도로건설 현장에서 공기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속도로는 평균 6.9년, 일반국도는 7.4년 등의 공기 지연이 이루어진다. 수도권 주요 전철과 전국 일반 철도 21개 가운데 15개의 완공 시기가 2~7년 정도 지연되고, 사업비도 7.9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 지연은 보상지연·설계변경·민원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공기 지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조기 준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의 풍부한 자금을 공공 건설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추후에 정부가 공사비와 차입이자율을 보전해주는 ‘민간선(先)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선투자’는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공공 건설사업에 민간 건설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비를 대출받아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하여 시공하고 완공 후 공사 대가를 지급받는다. 즉 이 제도는 조기 준공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의 조기 실현,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촉진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실현시킬 수 있다.

‘민간선투자’가 공공 건설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정부는 인센티브 수준을 ‘3년물 국고채 수익률의 평균값과 4% 중 큰 값’으로 제시했다. 2009년 1월에서 2월말까지의 평균 국고채 수익률은 3.61%에 비해 회사채는 AA-(3년)는 7.2%, BBB-(3년)는 12.2%이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신용 등급별 예상 금리를 신용등급 AA는 6%에서 BB는 8% 수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용평가등급이 좋은 건설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도 많다. 정부 제시 인센티브 수준과 건설사 대출 금리(회사채) 간의 차이가 크다. 민간선투자가 민간 건설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아무도 그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계속비사업에만 ‘민간선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기 지연은 장기계속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장기계속사업 가운데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적기 완공 및 재원 조달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민간선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왕지사 어렵게 마련한 ‘민간선투자’가 공공 건설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큰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2009. 03. 18>

박용석(연구위원·yspark@cerik.re.kr)